



호남예술제 개막 ... 코로나도 막지 못한 예술 꿈나무들의 열정

제66회 호남예술제가 27일 광주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발레 경연을 시작으로 개막했다. 송원초등학교 2-6학년으로 구성된 군무팀이 화려한 울동을 선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친환경 자동차 무한 경쟁 시대 광주시, 미래차 전략 있나 없나

‘수소차 선도도시’ 선언해 놓고
수소차 충전소 설치에 비협조적
전기차 생산 시설도 사실상 전무
GGM, 후발주자로 전략 우려

친환경 자동차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완성차 도시’를 목표로 하는 광주시의 미래차 대응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타 지역보다 먼저 친환경차 양대 축인 ‘수소차 선도도시’를 선언해 놓고도, 정부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에 비협조적이고 전기차 생산 시설도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지난해 선포한 ‘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 선언’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광주시와 서구, 북구 등에 따르면 광주에 설치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 충전소는 총 4곳으로, 하루 평균 92대를 충전할 수 있다. 시는 또 북

구에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 등 수소차 충전소 2곳을 짓고 있다. 광주에서 올해 운행되는 수소차가 1000여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충전소 위치도 광산구 진곡·동곡 등 외곽에만 있다 보니, 충전에도 애를 먹고 있다. 한 수소차 운행자는 “광주에서 충전 한 번 하려면 이동시간 등 평균 2시간이 소비된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도 수소차 충전소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민간사업자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충전소 설치를 돕고 있지만, 광주에선 이마저도 주민민원 등을 의식한 지지단체의 비협조·소극행정 등에 가로막혀 있다. 실제 민간사업자인 수소에너지 네트워크(주)는 2019년과 2020년 정부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 공모 사업에 도전해 광주 서구와 북구에 각각 1곳씩 총 60여억원을 지원받게 됐지만, 아직까지 설치 장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허가권을 가진 자치구는 사업 자축이 어렵게 물색한 부지마다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이유를 대며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환경부와 광주시까지 서구청을 직접 방문해 수소차 충전소 설립허가를 협조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구청은 “충전소 부지로 제안된 곳은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 측은 조만간 사업권을 반납해야 할 처지다.

북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민간사업자 측은 “지난해 7월 북구청과 수소충전소를 짓기로 사전 협의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한 끝에 선정됐지만, 부지확보

문제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광주 자치구들은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앞에도 설치된 수소차 충전소를 사실상 협오시설로 보고, 설립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구청은 “공식적으로 설치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간사업자 측은 “광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선 오히려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보조사업이 반납되면 모든 충전소 설립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런 바보 같은 행정이 어딴느냐”고 반문했다.

광주시는 전기차도 생산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사실상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세계에서 가장 최근 지어질 완성차 조립공장인 GGM(광주글로벌모터스)이 당분간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시설이 아닌 내연자동차 생산시설로 가동되기 때문이다.

광주와 달리 미국·영국·프랑스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현대차를 포함한 포드·GM·폭스바겐·볼보 등 대부분의 완성차 제조사들은 오는 2030~2040년까지 내연자동차 생산이나 개발·운행 중 단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GGM도 일단 4~5년 정도만 1000cc급 경형 SUV(스포츠유틸리티) 기술된 차량의 조립·생산을 통해 제조기술을 강화한 뒤 전기차나 수소차 생산 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친환경차 점유율이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발주자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코로나 확산세 ... 종합병원 ‘코호트 격리’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감염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 2380번 관련 1명, 담양 지인모임 관련 2명, 해외 유입 1명 등 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2389명을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광주 남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 등이 확진 됨에 따라 6층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24~25일 의료진 2명과 외주업체 직원 2명 등 4명이 확진됐다.

폐쇄된 병동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나왔으며 입원 치료가 계속 필요하고 전원이 어려운 환자 10명과 보호자 8명이 병동에 남았다. 방역당국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 580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시행했으며 566명이 음성 나왔고 1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날 4월 들어 음식점과 주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이어지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실제 이

달 들어 담양 지인 모임 관련 음식점 및 주점 등에서 43명, 북구 소재 호프집 관련 11명, 남구 소재 호프집 관련 8명 등 음식점과 주점 등을 매개로 광주에서만 62명이 감염됐다.

전남에서는 지난 26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이틀에 걸쳐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는 1045명이 됐다. 목포시 2명, 영광군 1명, 무안군 3명이다. 영광군 확진자(전남 1041번)는 이 개호 의원 담양사무실 당직자(홍보실장·전남 988번)와 담양에서 식사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받았다. 당시 식사 모임에 함께했던 구례군의원(1010번)도 앞서 확진된 바 있다. 이로써 이개호 의원실 관련 확진자는 전남 20명, 광주 37명, 전북 3명, 서울 여의도 1명(의 의원) 등 모두 61명으로 늘었다. 목포 신규 확진자들은 목포지역 고교생(1040번), 목포지역 중학교 교사(1032번)의 가족(1042번)이며, 무안지역 확진자는 영어과외교사와 학생(1043·1045번)으로 조사됐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5개 구청 민원업무 점심 휴무 7월부터 시행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5·6월 계도기간 최소 인원 근무

광주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7월부터 점심시간에는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광주 구청장협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27일 민원업무 점심 휴무제 시행을 합의했다. 주민 불편 해소와 적응을 위해 내달부터 2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7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다. 계도기간에는 최소 인원이 민원 응대를 하고, 전화 안내와 홍보 활동을 펼친다. 혼선을 줄이고자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가 단일화한다. 점심시간 업무 공백을 줄일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등은 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5개 자치구와 공무원노조는 점심시간 민원 휴무제 시행 이후 시민 불편이 발생하면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해소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지난 2020년 12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제기한 ‘차 체험관 철거소송’ 상고 심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다.

본 소송은 선암사의 법적 등기소유권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권원이 없는 불법 무단 점유자인 태고종 선암사 주지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소유의 토지상에 순천시가 건립한 ‘차 체험관’을 철거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2011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소 계기에 대해 2014년 4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피고 순천시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 6월 광주지방법원 항소부 또한 피고 순천시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피고 순천시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태고종 선암사는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사 제기된 2015년 6월 이후 대단히 이례적으로 약 5년 6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하다가 지난 2020년 12월 24일 선고를 하였습니다.

선암사는 국가법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된 전래의 사찰입니다.

우리나라 전래사찰은 특정 시대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조직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공적 자산이기에 오로지 계단적 성격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시기의 사람들이 임의로 그 자산의 성격이나 지위를 변동시킬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전래의 사찰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에도 국가제도로 직접 통할하거나 국가에서 위임한 단체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며, 일제강점기는 물론 현재에도 나라의 공적 자산으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전래의 사찰은 사찰령이 폐지되고 불교재산관리법으로 대체한 이래 오로지 국가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 심사를 거쳐 등록한 단체에 귀속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며, 선암사는 이러한 국가법(불교재산관리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에 합법적으로 귀속된 것입니다.

국법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된 선암사만이 진실한 실체이며, 동일한 자산으로 하는 다른 법적 실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적법한 권한행사는 부정하고, 오히려 1970년도에 창종한 태고종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선암사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권한 없이 선암사를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태고종 승려들에 의한 착시적 현상에 집착하여 사찰령 및 불교재산관리법의 규정과 의미, 내용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표피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순천시의 ‘차 체험관 건립공사는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순천시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경내지에 건립한 차 체험관은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건조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폐지의 경우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산 및 부동산의 대여·양도 또는 담보 제공의 경우에는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2007년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경내지에 ‘차 체험관’을 건립하면서 등기소유자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통사찰보존법 상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또한 받지 않았으며, 별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심각한 하자가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유일한 종단입니다.

일제강점기시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사찰주지 자격인 비구계 수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말살하고 일본 불교화를 본격화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대부분의 전래 사찰들이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신 비구승들을 중심으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불교 전통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화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대한불교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오롯이 계승한 유일무이한 종단임을 정부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1969년 2월 문공부, 재산관리인 해제와 조계종 임명 주지에게 선암사 사무인계, 1969년 10월, 통합종원 유효 대법원 판결, 1972년 8월 문공부, 태고종 선암사는 부존재하고 선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라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 등)

대한불교조계종은 민족의 문화유산인 전래사찰 선암사의 온전한 보존과 계승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태고종이 불법적으로 점유 및 거주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운영과 관리를 극렬하게 저항해왔던 상황이 지속되어 왔기에, 재산관리자 사찰운영과 관리를 불가피하게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1970년 문공부가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승주군수(현 순천시장)를 임명 이후 재산관리인을 해임한 2011년까지 41년 동안 지속적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재산관리인 해임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한 이유 또한 대한불교조계종의 권한 행사가 제한적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관리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운영과 관리를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던 것은 선암사 임주로 인한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한불교조계종의 깊은 고심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현행판 판결을 기대합니다.

한국불교가 전래된 지 1,700년입니다. 1,700여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불교가 현재에 전승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한국불교는 민족 고유의 문화자원이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 왔습니다. 한국불교가 이처럼 많은 희생과 인내를 감내하며 오늘에 이르게 된 이유는 불초 이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역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과 그 반면에 흐르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러한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이 훼손되지 않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유일한 계승자인 대한불교조계종의 합법적인 지위와 권원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국가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정받았던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정체성을 옳고이 이어 한국불교의 전통성이 상실되지 않고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